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이 대통령, 9일 지역 국회의원·시도지사 등과 오찬 특별법·통합단체장 논의…속도·시기 놓고 시험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특별법 제정과 통합단체장 조기 선출 구상까지 거론되며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가 이번 주 예정되어 있어, 통합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논의가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정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특별법 제정과 통합 단체장 조기 선출 구상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 두 단체장은 정부대 신년 인사 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났으나, 공식 행사 성격상 구체적인

이 자리에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도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통합 구상이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어떤 정치적 무게를 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 두 단체장은 정부대 신년 인사 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났으나, 공식 행사 성격상 구체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념촬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 시장에게 “(행정통합을) 하기로 했다면서요”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김 시장에게 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인식이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해졌다. 이후 대통령실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 일정을 공식화하며 논의의 무게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광주·전남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밝은 수위와 표현 방식에 따라 통

합 논의의 정치적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에서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어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시장·전남지사 주요 후보군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된다.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둘러싼 입장이 공개적으로 교차할 경우, 행정통합 논의는 경쟁 이슈를 넘어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재선 도전에 나선 강 시장을 비롯해 민형배·정준호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전남지사 선거는 김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신경훈·주철현·이개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민형배·신경훈·주철현 의원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시점은 2030년 전후로 설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훈 의원은 “당장 통합을 선언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며 단계적 접근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강기정·김영록 지사와 정준호·이개호 의원들은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 구상을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 논의의 동력을 지방선거와 연계해 실질적인 결단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통합의 큰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기

와 방식은 지역 합의에 맡기는 메시지를 낼 경우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반대로 조기 통합단체장 선출을 둘러싼 입장 차가 부각되면 논쟁이 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대 오찬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선언 단계를 넘어 입법과 선거 일정이라는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합의가 모아질 경우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전이 확인되면 통합 문제 자체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임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화동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반도 문제 등 논의

8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3박 4일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며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며, 국빈 자격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8년 만이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짙은색 코트 카림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중국 측 환영을 받았다. 공항에는 인허권 중국 과학기술부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

국대사 부부, 노재현 주중대사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꽃다발을 든 화동들도 대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고 인부장 및 다른 대사 부부 등과 대화를 나눈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방송의 핵심은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중 정상 간 회담으로,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대화 이후 두 달 만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화·관광·교류의 결렬률을 저지른 온·한한령·한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 “문화 교류 공

감대를 넓히며 접근하겠다”고 했고, 서

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경상 차원의 논의와 실무 협의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 등 민감한 외교 사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

의대 증원 집중 논의…규모·발표 시점 ‘관심’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르면 설 전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조만간 의사인력증원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르면 설 전후로 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금물살 타나

짧은 준비 기간에 시도민·의회 동의 선결돼야

법적 근거·의견 수렴 등 과제 산적…지방의원 정수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경훈·주철현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선언문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해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오는 5일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와 전남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시도의회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식은 통합주진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 광역 자치단체의 장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공무원 등 행정

조직은 통합 자치체로 흡수되지만, 지방의회 구성과 의원 정수 문제는 특별법 부칙 등을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밤의원과 대표 밤의원에는 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지만, 광주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형배 의원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마한 응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전남도, 나주 오량동 요지·영암 시종고분군 등 4개소

전

남

도

는

나

주

의

기

자

기

관

고

분

군

을

세

계

유

산

으

로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

정

목

록

등

재

지